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대북 특사 파견 검토할 때다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이 흐르고 있다. 북미 간에 주고받는 말 폭탄은 일촉즉발 상황을 연상케 한다. 한반도의 불확실성은 수출주도형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보낸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염원이 담겨 있다. 북한은 말 폭탄과 몰아치기식 도발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다. 남북한은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화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북측은 '선 북미 대화, 후 남북 대화'를 선호한다. 자신들이 강조하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스스로 위배한다. 우리 측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한다.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군비 통제·비핵화 문제로 나아가는 단계적 전략을 선호한다. 당분간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와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지속될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7월 6일 '평화로운 한반도'의 신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 20개국 국제기구인 G20 정상회의 기간 중국·러시아·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막겠다, 우리의 안보를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한반도 운명의 한국 결정을 역설했다. 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불추진, 인위적 통일 불추구'의 3-NO 원칙을 밝히면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평화와 번영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지난 9년 동안 대남 불신의 골이 깊고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선뜻 나서지 못한 듯하다. 한반도는 정전 체제 상태이다. 불신과 오해는 언제든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철학도 전략도 없는 북미 간 최고지도자들의 '겁쟁이 게임'은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 경계 태세 강화와 쉴 틈 없는 검열로 피로감이 누적된 남북한 초병들은 안전사고의 복병들이다. 우발적 총기 사고가 충돌로 이어지고 국지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다. 대화의 틀도 없고 오고 가는 길목도 없다, 연락하는 통신 채널도 없다. 서해에서, 동해에서,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거나 확전을 방지할 수단이 없다. 남북관계 복원의 시급성을 보여 준다.

남북대화 복원에는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 상향식은 실무 접촉, 고위급, 정상회담 등 대표급을 높여 가는 것이다. 시간이 소요되지만 결렬에 대한 위험부담이 덜하다. 대화를 복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하향식은 정상회담, 고위급, 실무급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오랜 대립 상태에서 대화로 전환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최고지도자에 집중된 남북한의 권력구조에서 하향식이 효율적이다. 남북한은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하향식을 경험했다. 2007년 제2차 정상회담까지 상향식도 경험했다. 현 단계 남북관계는 대화의 복원 차원에서 상향식이 현실적이다.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고 당국 간 불신의 골도 깊기 때문에 하향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대북 특사 파견은 상향식과 하향식의 절충형이다. 특사는 회담 대표가 아니다. 특사를 매개로 최고지도자 간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다.

대북 특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북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여야와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중량급 인사면 더 좋다. 준특사든 실무자든 북측과 의제·시기·방법·절차 등을 조율한 후 우리 정부가 먼저 공개적으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순리적이다.

파견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11월 하순이 적절하다. 너무 늦으면 평창 평화올림픽 개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 특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핵·미사일 전략, 북미관계 등에 대한 입장 파악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핵·미사일의 북미 간 논의(남한 배제), 제재와 대화 병행 불가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설득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특사 상호 교환 방문으로 한반도의 비핵화·평화 체제·평화통일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종교칼럼

라쇼몽(羅生門) 효과

변 찬 석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정사목

요즈음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적폐(積弊)이다. 그런데 이 적폐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적폐 세력이나 적폐 청산을 이야기 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적폐 세력이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폐단의 무리나 세력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부패와 비리를 자행하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한 무리이기에 당연히 청산을 해야 한다. 이를 적폐 청산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였던 제헌 국회에서는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에 공포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같은 해에 설치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같은 적폐 청산 시도가 있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동안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친일파의 청산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적폐 세력인 친일파들은 미군정(美軍政)의 친일파 보호 정책으로 사회 각 분야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해방에 기여한 애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무너진 민족정기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설치 목적에 따라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 세력의 비협조와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친일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한국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적폐 청산의 실패로 인해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가치관 혼란에 빠졌으며, 사회에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횡행하는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 사실 적폐 세력에게 적폐 청산은 자신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작년 국정 농단 사태를 통해 시작된 촛불 정국에서는 다시 적폐 청산이 커다란 화두로 떠올랐고, 이러한 국민의 염원으로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행보에 대해서 더욱 속도를 내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하나의 행동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1950년에 찍은 '라쇼몽'(羅生門)이 그것이다.

이 영화는 부부가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 남편은 살해당하고 아내는 겁탈당한, 어찌보면 사실관계가 아주 단순한 살인 사건과 강간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도적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죽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리고 숨어서 사건을 지켜본 나무꾼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해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를 보여준다.

영화는 같은 사실이라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라쇼몽 효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으로 해석하면서 본질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과실은 줄이고 남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신의 기억마저 스스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라쇼몽 효과에 따른 증상이 심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나 공동체의 지도자나 책임자가 된다면 그는 책임은 지지 않고, 만약 어떠한 문제가 터져 책임을 질 일이 생기면 자신을 대신할 희생양을 찾게 된다. 결국 실패의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은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라쇼몽 효과에 따른 현상을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완전하게 극복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는 이기심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은 기억을 공유하면서 공감할 수 있을 때, 라쇼몽 효과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광주·전남 관광 활성화하려면

최 대 길
삼일여행사 대표이사

지난 40년 동안 광주에서 여행업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온갖 역경을 헤쳐 온 80대의 노병입니다. 지난번 광주일보에 난 '10월 28일부터 무안공항에 국제선 취항 전멸'이라는 기사를 읽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도 서글퍼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돈을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내외 상황은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시기로 생각되어 '여행업계 후배들이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전남 여행업계 후배들과 함께 무안-기타큐슈(일본) 정기편 취항에 맞춰서 신상품 개발을 위해 기타큐슈시 초청으로 1박2일 팸투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명의 공무원이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행이 기타큐슈에 머문 시간은 1박2일(토·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기타큐슈시 사카이 공항기획과장과 관광계장은 휴일임에도 종일 우리를 안내해주었습니다. 사카이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기타큐슈 공항도 무안공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제공항으로 개항을 했지만, 무안과 마찬가지로 4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후쿠오카시에 기존의 국제공항이 있어서 개항 후 10여년이 지나도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전락했습니다.

기타큐슈시와 시민들은 어떻게든 기타큐슈발 국제선을 유치하여 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기타하시 겐지 시장의 지시와 관심으로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불과 2년 만에 무안~기타큐슈, 인천~기타큐슈, 부산~기타큐슈, 기타큐슈~천진 등 4개의 국제선 정기편을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의 또 다른 노선과 대만~기타큐슈 노선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후쿠오카에 밀려 전혀 볼 수 없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요즘에는 기타큐슈 고쿠라성 주변에 넘쳐나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뭔가?"라는 생각에 울화가 치밉니다. 그동안 기타큐슈 공항에 불만이 많았던 공항 인근 지역 상인들에게 "요즘은 어떠냐?"고 물어보니 "공항의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싱글벙글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외국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틀간 우리와 동행하며 안내하던 사카이 과장과 관광계장이 점심 식사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찾아보니 1층에서 따로 우동을 시켜먹고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더니 "초대한 손님들 식사비 2130엔은 기타큐슈시가 전액 지원하지만 공무원인 우리들 식사비는 2130엔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1층에서 700엔짜리 우동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겠다고 해도 웃으며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광주·전남 관광 관련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공항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요. 기존의 1·2차 산업은 날로 정체되고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화두인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전남의 공항 및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아직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안 공항이 활성화되면 그 파급효과는 곧바로 전남지역 관광업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관광지가 활기를 찾을 것이고, 호텔·숙박업은 물론 식당이나 자영업자들도 더불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도는 정기 노선 확보 등 무안 공항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도 상생 차원에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기타큐슈 공항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듯이 무안공항 활성화문제는 비단 우리 관광업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업계와 호텔·숙박·음식점 등 관광업계는 내년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출마자들이 광주·전남의 관광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社 說

'공공개발권' 포기 건설사만 배 불려서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이 남용되면서 공공의 목적보다는 아파트 건설 등 건설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관 개선이나 주변 지역과의 조화 같은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지구단위계획이 건설업자들의 '수익 늘리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월호에 게재된 '주택법 의제 처리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실태 연구 -광주광역시 35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밝혀졌다. 공동 저자인 윤현석·윤희철·홍상호 씨 등은 200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주택법 의제(擬制)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가 건립됐거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35개 구역을 대상으로 그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수립된 광주 지역 35개 사업 구역 대표지번의 토지 소유주는 모두 지역 내외의 건설·신탁회사로 주민 제안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 구역의 개발 행위 전 토지의 지목도 임야와 전답이 21곳에 달해 이들이 도심 내 자투리 토지나 외곽의 값싼 토지를 매입해 고층 아파트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해당 부지 및 인근 땅값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 광주시가 공공을 위한 '개발권'을 업체에 넘겨주면서 개발이익의 환원이나 경관 개선 등을 위한 조치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업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는 고층·고밀 개발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계획 입안 주체를 거주민으로 명기하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느는 노인 교통사고 대책 없나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노인 사망 교통사고의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한다. 최근 5년 새 전남과 광주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0명에 달하며,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차량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700여 명에 이른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은 전남이 56명, 광주는 24명이었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운전자 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8% 이상 증가해 2012년에 700명을 넘어섰으며, 부상자는 연간 3만 명에 달한다.

노인 교통사고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도, 자전거나 승용차 운전자도 자연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운전 중 사고에 대한 인지나 방어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농촌에서는 젊은 층이 적어 상대적으로 노인 운전자가 많은 탓에 도시보다 사망사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노인은 조그만 사고에도 크게 다치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노인 교통사고를 어린이 교통사고 못지않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경찰과 교통 관련 기관들은 안전모 착용 등 고령자 대상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 자전거에는 야광 스티커 등을 부착시켜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 전남 지역에서는 차량 부착용 실버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으나 이를 부착한 차량이 얼마 되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70세 이상 노인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실버 스티커를 부착시켜 다른 운전자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無 等 鼓

수치의 두 얼굴

전체 인구 5500만 명을 헤아리는 미얀마는 줄잡아 40여 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이지만 이슬람을 믿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도 많다. 같은 영토에 살지만 타 국민이나 다름없다. 그중 하나인 아라칸족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쓰는 벵골어 계통의 치타고니안(Chittagonian) 방언을 쓰고 '로힝야'(Rohingya)로 자칭한다. 주류 아라칸족은 이들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멸시한다.

'미얀마 민주화의 심장' 아웅산 수치 여사가 로힝야족 때문에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자문역'이란 직함으로 미얀마를 사실상 섭정하는 그가 학살을 방조한다는 이유다. 로힝야족 반군단체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경찰 초소를 습격한 것을 빌미로 군부가 주민 수백 명을 학살하는 등 '인종 청소'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치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전개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나서 수치의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는 되레 로힝야족 사태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도 성명을 내고 "광주 인권상과 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이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치에게 준 광주인권상과 명예시민증을 문제삼은 것이다.

미얀마 전문가인 스웨덴의 버릴 린트너 기자는 이미 몇 해 전 아웅산 수치의 변절을 어렴풋이 읽어냈다. 지난 2007년 발간한 '아웅산 수치와 버마 군부'라는 책에서 "아웅산 수치가 아직까지 반군 활동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부의 탄압을 받아 온 소수민족들의 고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은 놀랍다"고 꼬집었다. 정치적이거나 혹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고통에 둔감하다는 지적이다.

아웅산 수치의 민낯은 그가 독재 군부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숱한 박해를 받아 온 당사자였기에 더욱 안타깝다. 자신의 상처를 바탕으로 국민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했던 세계인들이 그래서 더 분노하는지 모른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우울한 소식을 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